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전주시, 정부에 정책 실효성 강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지속 촉구 국민 보호 위한 기초지자체 단위 '맑은공기선도지역' 조항 신설 건의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가가 직접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광역·기초지자체가 책임 주체로 되어있어 미세먼지 관리 및 보호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보호·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도 정부가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특성상 바람과 강수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특정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 동시·광역적으로 발생해 어린이 노인만이 아닌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의 확산성과 광역적 영향 등을 고려해 기초지자체 단위 내 일부지역으로 한정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정책실효성에 맞지 않는 만큼 정부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현행 집중관리구역의 경우,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호지원이 규정돼 일 반국민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현행 집중관리구역 이외에 추가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칭 '맑은공기선도지역' 지정 및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보다 촘촘한 국민 건강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집중관리구역과 신설되는 맑은공기선도지역에 대한 지정과 지원 결정 권한을 기존 광역·기초지

치단체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격상하고, 필요사항을 환경부령(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노후경유차 저감해화 사업 및 친환경차량 보급 사업 추진 △미세먼지과수관 양성교육 실시 및 솔루션 포럼 개최 △맑은공기 지킴이 구성 및 배대식 개최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로 분진흡입차 도입 운영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펼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어린이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과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없는 만큼,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학교 밖 청소년 발굴·보호 전북교육청은 21일 전주완산경찰서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선도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5면>

전북경찰,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 추진

7월 12일까지 2개월여 동안 협박·갈취·폭행 등

전북경찰이 올해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조직폭력배의 협박·갈취·폭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은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와 국민 체감 치안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박장·게임장·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 운영과 자본 투자 갈취 행위·건설업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이권개입, 불법 대부업 운영과 채권 추심 빚자 협박 행위 등이다.

또한, 사우나·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서의 문신 과시 등 시민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검거 사례는 지난달 2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광장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주먹으로 폭행해 4주간의 상처를 입힌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 B모(21)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 동안 광역수사대를 동원해 조직폭력배 활동지역에 가장한 이권개입, 불법 대부업 운영과 채권 추심 빚자 협박 행위 등이다.

또한, 사우나·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편의제공 대가 뇌물 수수' 전 한전 간부 징역 3년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유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한전 전력공사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모(61)씨에게 징역 3년과 각각 40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배전공사와 송전탑 유지보수, 기술검토 등 각종 편의를 제

공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총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설치하기로 B씨의 회사와 계약한 뒤, 계약금을 대납 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비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조작성 영수증과 차용증을 작성해 허위진술을 계획한 점,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식당서 금품 훔친 40대 '덜미'

식당에 들어가 옷과 지갑 등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4분경 익산 시내 모 식당에서 B모(26)씨의 점퍼

와 지갑 등 총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B씨가 식사를 하던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이스타항공 바둑단 창단식 21일 오후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바둑단 창단식에서 선수단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전주시, 한발 앞서

이를 위해, 시는 장애인의 생애주기 및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가능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 계획이다.

이울러, 장애인단체, 동별 통장회의, 각종 자생단체 등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장애등급 전산자료에 대한 오류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등급과 관련된 13개 조례의 조기 개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도 들어갔다.

또한, 22일에는 달라지는 제도 시행

관련 13개 조례 개정 착수

오는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혼란을 예방키 위해 전주시가 준비에 나섰다.

장애등급제는 도입 이후 장애인을 의학적 장애상태에 따라 6단계(1급~6급)로 구분, 장애인이 처한 다양한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의 2단계로 단순화된다.

시는 새롭게 도입되는 장애등급제에 대한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에 앞서 완산·덕진구청 및 35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북도청에서 일제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조례 미개정, 홍보 미비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서남이 전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5월 임시회 의원발의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거주기간 제한 등을 삭제토록 주문하는 등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내달부터 종량제 봉투 이용 편리해진다

전주시, 봉투 색상 '흰색'으로 단일화
타 시군 전입자도 이전 거주지역 잔여 봉투
한시적 사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노란색과 흰색으로 구분됐던 소각용 종량제 봉투의 색상이 흰색으로 단일화 된다.

이로써 오는 6월부터는 아파트에서도 흰색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또한 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타시·군에서 전입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전 지자체에서 구입하여 사용 중인 종량제봉투를 전입 6개월 이내에 인증스티커를 붙일 경우 최대 10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간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기존에 남아있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거나 색별로 다른 수효와 공급으로 인한 재고 발생과 공급부족 등 봉투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소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담은 용도로 구입해 사용한 뒤 생활폐기물류를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봉투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279만장을 생산해 부족현상을 해소키로 했다. 동시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1660개 점포 중 재사용 봉투를 취급하지 않는 1311개소 점포에 대해서는 재사용 봉투를 판매토록 안내문을 배부했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단일화와 재사용 봉투 확대는 시민 친화적 정소

행정의 실효성"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을 살리면서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진열중인 빵 훔친 40대 검거

진열중인 빵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 40분경 전주 완산구 모 제과점에서 진열 중인 빵과 쿠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도 없고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내

경찰, 택시기사들 무더기 적발... 3억7000만원 행진 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 원을 챙긴 택시기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해 중북 보장되는 2~3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류업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 뒤를 따라가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27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총 3억 7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 모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A씨는 범행에 가담한 인원을 모아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 사고를 내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

또한, A씨 등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택시기사와 지인, 노동조합 임원 등을 끌어들이고 범행에 사 용할 차량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합